

'5·18 헌법 전문 수록' 이번이 기회다

개헌 분위기 속 정치 지도자 모임 올 기념식 약속의 자리 기대 5·18 기념재단, 26일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 설명회 개최키로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이 다가오면서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재점화한 개헌의 물살을 타고 이번에는 반드시 5·18이 헌법에 수록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것 공식적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5·18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재단(재단)은 광주·전남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8명을 대상으로 5·18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재단은 이 자리에서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5·18 헌법수룩의 현황과 당위성 등을 알릴 방침이다.

재단 등은 최근 총선 이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등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5·18 헌법 전문수룩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도 개헌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민주당의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헌법수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재단은 그동안 5·18 인식 조사 결과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70%에 달한다는 점도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과 관련 상임위원 면담을 위한 구두약속까지의 진행된 상태라는 것이 재단 측의 설명이다.

박강배 재단 상임이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한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이 헌법에 수록돼야 5·18의 정체성이 확립 될 것"이라면서 "다이상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5·18이 헌법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월 단체도 오는 26일 담양 소재원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8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헌법전문 수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오월을 앞두고 각종 5·18법안의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하지만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끊기 위해서라도 헌법전문 수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집권당이 다수당이였음에

도 헌법전문 수록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장 헌법전문 수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도 있지만 당시와 또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오월 관계자들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일부 오월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달이 채 남지 않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 정부기념식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 5·18기념식이 전 정치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첫 공식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아직 대통령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제 42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시 5·18 유공자 유족들과의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광주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난해까지 참석했다는 점에서 올해도 윤 대통령 참석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당대표까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5·18기념식에서 의미있는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도 5·18 민주화운동 합법수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전국 시도에 요청하고 나섰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59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고 부시장은 "5·18이 44주년을 맞았다"며 "특정 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와 가치로 기억되고 추모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5·18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직접 맞아와 있다"며 "5·18, 부마 민주항쟁, 6·10항쟁의 민주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4주년 5·18 기념행사는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을 주제로 다음 달 15~19일 광주 전역에서 전야제, 정부 기념식 등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성친화도시 시민 역량 강화 교육
광주서 북구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지난19일 열린 여성이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다행복'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에서 북구 직원과 시민참여단원들이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법원 "5·18왜곡 도서 출판 지만원 손해배상해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 등을 수록해 5·18을 왜곡·폄훼한 서적을 출판한 극우논객 지만원(83)씨가 5월 단체와 유공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18일 5월 단체(5·18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유공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총 9000만원을 단체와 개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도서를 추가 출판·배포하거나 도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원고들에게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는 유공자 5명과 함께 지씨가 출판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당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에서 북한군 투입설 등을 기술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체 4곳에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절반만 인정해 1000만원씩을 인정했지만, 유공자 5명에게는 각각 1000만원씩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진실이 드러난 재판"이라면서 "이번 재판을 계기로 5·18을 왜곡하는 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21년 2월 해당 도서의 내용이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며 출판·배포금지 가치분 신청을 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와 별개로 5·18 폄훼·왜곡을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지난해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나체사진 달라·대신 갚아라" 사채업 일당 검거

불법 고리 사채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채무자들의 지인에게 대신 변제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A(38)씨 등 5명을 대부업법 위반·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점조직 형태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

영하며 피해자 200여명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해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보가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지인들의 연락처, 사진, 가족 정보 등을 요구하고 대신 변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나체 사진이나 성적 동영상 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피해자인 광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학부모 연락처를 일당에게 넘겨 학부모가 대신 변제하라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이 활동 거점을 해외에 옮길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중 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우위니아그룹 회장 보석 신청 기각하라"

노조 성명서 발표

수감 중인 박영우 대우위니아그룹 회장이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석을 신청하자 노조가 법원에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성명서에서 "체불임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공모해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지난 3월 7일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체불된 임금은 700억원에 달한다. 지

난 3월 20일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보석청구 허가를 받으면서 박 회장도 지난 18일 3차 공판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노조는 "박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체불 임금 변제를 약속하고 골프장을 매각해 1200억 원에 달하는 이익금을 확보하고도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우 위니아 전자 및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의 임금체불에 관한 청원'에는 총 2만 8968명(57%)이 동의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신뢰할 수 있는 신문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보도 광주일보가 선도합니다.

**중앙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은 지방신문이 선도합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광주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